

# 보호무역 강화에 주력산업 압박... 광주·전남 수출 '먹구름' 우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광주·전남 지역 주력산업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산업과 수출 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주요국의 관세·통상정책 변화로 확대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먼저 자동차와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우 품목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함께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직접 노출돼 있어서 관세 부담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한은 광주전남본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여파 분석  
자동차·철강 직격, 반도체·석유화학은 간접 충격 우려

있다고 짚었다.

반면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정제 산업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간재 수요 변화, 국제 가격 경쟁 심화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국가·품목별 관세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EU와 캐나다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멕시코의 전략 품목 관세 부과 방침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한국 수출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는 등 복합적인 부담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은 산업 구조상 특정 주력산업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혔다.

주력산업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 생산 감소와 부가가치 축소, 고용 위축, 기업 투자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미국 관세 25% 부과 시 자동차 대미 수출 전망

2025년 상반기(25% 관세 적용 시)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액 16.4% 감소  
전기차 수출 물량 80% 이상 급감

관세 15% → 25% (10%p 인상)  
현대차·기아 합산 기준  
연간 약 4조원 부담 (분기당 1.6조원)

미국 내 한국차 가격 가격 인상  
대당 평균 약 6000달러(약 800만~900만원) 인상  
경쟁 상대인 일본·유럽 대비 가격 우위 상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 성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시·도 행정통합지지. 사진-광주신용보증재단제공

## 광주·전남 신보재단 통합 추진... "자금 5155억 전국 3위" "통합 후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능 대폭 확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양 시·도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통합해 신용보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와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28일 광주신보 본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는 양 재단의 이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시·도 행정통합의 정책적·경제적 취지에 공감해 통합 신용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보 염규승 이사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에 4곳과 출자기관 1곳, 출연기관 15곳이 있으며, 전남은 공기업 1곳, 출연기관 24곳이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기능이 비슷한 출연기관 통합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보 신용보증재단은 통합이 추진 될 경우 기관의 규모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본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 2219억원, 전남 2936억원이며 통합할 경우 규모가 5155억원으로 늘어 전국 3위의 신용보증재단으로 도약한다.

신영길 기자

##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대상 기관 절반이 도입 안해... 광주 최고-인천 최저

한국노총, 전국생활임금현황 전수조사 발표

광역단체 평균 1만2233원...서울은 중간 수준

광역단체는 전면 시행...기초단체는 지역 격차

"6월 지방선거서 주요 공약되도록 요구안 전달"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도입·시행 중인 기관은 132곳으로, 전체 시행 대상 260곳 중 50.8%에 그쳤다.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시행 중이었고, 시·도교육청은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106곳(46.9%)이 도입했다. 도입 기관 수는 전년보다 7곳 늘었다.

광역단체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시급 1만2000원대를 돌파했다. 평균 시급 1만2233원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인

데, 광주는 이보다 2983원 높은 1만3303원이었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62만3447원 많은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1만2552원), 전라북도(1만2410원), 전라남도(1만2305원), 부산광역시(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았다.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전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인천은 시급 1만2010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와 비교하면 시간당 1293원, 월 환산 시 27만237원이 적다. 인천 다음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1만2011원)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경기·광주·대전은 기초단체 전 지역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대구·경북·경남지역은 1곳도 없었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 평균은 1만1805원으로, 광역단체(1만2233원) 평균보다 428원 적었다. 월 환산 시 8만9452원 차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만1353명)였고, 서울시(1만4000여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곳은 7개다.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충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등 6곳이며, 충남교육청이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임금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행지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조직과 간담회를 갖는 등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시행지역의 경우, 올해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주요 후보의 노동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온힘

2월 13일까지 축산물이력제 단속... 위반시 행정조치

단속을 함께 펼치는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

은 업소(돈감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광주시, 구직활동수당 지원 청년 1500명 모집

2월2일까지 1차 모집... 1500명 충원때까지 매달 추가 공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구직청년 1500명을 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 광주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함께 취·창업 준비형, 직무역량강화형, 기업

탐방형 등 다양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기간 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구직청년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규칙했던 모집 일정을 목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매달 모집으로 정기화해 청년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1차 모집은 1월2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목표 인원 1500명이 충원될 때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